

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

○ 영덕군연합회 회의실에서 원전 반대 간담회 개최

- 12월 5일 영덕군연합회 회의실에서 '영덕·삼척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연대회의'의 주최로 <신규 핵발전소 백지화, 어떻게 할 것인가?>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- 이 자리에서 권순관 영덕군연합회 회장은 "농산물이 생산 되더라도 유통 부분에서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것"이라며 "지금 울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영덕군 이름이 새겨진 박스에 담아 팔고 있는 사례까지 있다"고 발언했음
- 간담회에 참석한 한농연 회원 및 농어민들은 "영덕군은 사과와 복숭아, 블루베리, 포도, 배 등 농산물의 연간 매출액이 490억원이나 되지만 울진군은 2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"고 말했다. 영덕은 핵발전소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농산물과 영덕 대게 등 수산물이 풍부해 지역 경제 발전에 무리가 없다고 강조하였음
- 특히 3조원의 상표가치를 가진 영덕 대게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송이 등 영덕의 각종 농수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관광객 감소뿐 아니라 농어민의 피해도 클 것이라고 우려했음
- 주민들은 원전 유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정보와 공정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음. 특히 "원전 건설 예정 지역 주민의 의견만으로 (원전 건설을) 결정한다는 것은 영덕 주민의 삶을 깎아내리는 것과 다름없다. 삼척이 왜 원전을 반대하고 나섰는지 영덕군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"이라고 말했다

지방 농정 소식

○ 영동군 농기계 임대사업 '호응'...올해 5,200여건 임대

- 충북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음. 11월말 기준 올해 농기계 임대 건수는 총 5,233건에 달하였음. 이는 2012년 3,749건과 비교하면 40% 가까이 늘어난 수치임
- 영동군은 2001년 처음 임대사업을 시작했으며, 농기센터 외에 2012년 남부 임대사업장과 올해 서부 임대사업장을 추가 개소했음. 처음 12종 40대였던 농기계도 현재는 69종 606대로 늘었음
- 영동군은 "임대사업장이 늘어난데다 임대료까지 저렴해 농민들의 호응이 해마다 늘고 있다"며 "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·수리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"고 언급함

○ "제주도의 하우스 지원 정책이 오히려 농가부채 늘려"

-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은 12월 8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

- 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1차산업 분야에서 일부 산업에 지원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함
- 농업분야에서는 "감귤에 지나치게 예산이 몰려있다"며 "감귤도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지 않고 어떻게 팔 것인가,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"고 언급했음
- 특히 제주 농민들의 부채가 전국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정의 농업정책이 부채 탕감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음
- 농민이 하우스를 지으려면 평당 14만원이 드는데 제주도는 이 중 60%를 지원하고 있음. 그런데 하우스 건축비 기준액이 10만원으로 책정돼 있어 정작 지원되는 금액은 6만원에 그치고 있어 농가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임
- 이에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"정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하면서 개선해 나가겠다"고 답변했음

○ 횡성군, 농업안정기금 금리 인하·상환기간 변경

- 강원도 횡성군이 농가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'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'를 개정해 2015년 이후 지원되는 금리를 1.5%로 개선했음
- 시설자금은 1농가당 3천만원, 농업법인 5천만원으로 변경하고 운영자금은 1농가당 2천만원, 농업법인은 3천만원 이내로 모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토록 했음
- 특히 운영자금은 상환조건을 기존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변경해 소액의 경우 타 기금을 사용하는 것 보다 유리해졌음
-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법인은 내년 1월말까지 읍·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됨
- 신청된 농업인 및 법인의 사업계획은 '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' 심의를 통해 3월중 최종 확정되며 융자금은 4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

○ 전산조작 대출금리 올려받은 대구광역시 모 농협 조합장 및 상임이사 2명에게 집행유예 선고

- 대구지법 제3형사부(김연우 부장판사)는 대출 고객의 금리를 임의로 올려 수익원을 가로챈 혐의(컴퓨터 등 사용사기)로 기소된 대구 모 농협 전 조합장 이모씨와 전 상임이사 성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,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음
- 이씨 등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대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산을 통해 임의로 가산금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고객 191명으로부터 4억 7천여만원의 이자를 더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
- 이들은 양도성예금증서(CD) 금리 변동으로 대출이자율이 하락하자 농협의 수익 감소를 피하려고 범행을 저지렀음